## '영호남 상생'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첫 발 뗐다

국토부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완료 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땐 2021년께 건설 사업 본격화 영호남 1시간 생활권 열려

정부가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전타당성조사에 나서면서 영호남 상생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달빛 내륙철도 사업이 첫 발을 떼게 됐다.

22일 광주시는 "조달청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의뢰를 받아 최근 대구~광주 간 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대구~광주 철도건 설 사전타당성조사'를 긴급공고 했고, 용 역비는 4억원이다. 용역기간은 오는 8월~ 2020년 6월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16년 6월)에 따라 철도 수혜 지역을 늘 리기 위해 광주 방면의 경전선, 대구 방면 의 경부선을 연결해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를 늘리겠다는 배경도 설명했다. 또 대구~광주 철도 건설에 따른 통행시간 단 축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영·호남 간 수송력을 확보해 지역화합을 도모하는 차 원이라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입찰을 시작해 8일 오후 2시 마감한 후 3시에 개 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용역수 행기관이 정해지면 달빛내륙철도를 건설 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가 본격 시행



된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대구간 191.6km 구간을 최고시속 250km로 달리는 고속철 도로 연결해 '영호남 1시간 생활권'을 만드 는 철도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달빛내륙철 도 건설은 영호남의 상생 사업으로 추진되 고 있으며 올 국비에 사전 타당성 용역비 가 반영됐다.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철도 교통인 프라가 열악한 영호남 내륙도시 간 연결로 산업구조 연계 등 일자리 창출과 관광특화 사업추진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 후 화해 분위기에 맞춰 남북철도와 달빛내 륙철도 연계를 통한 향후 남북 경제협력사 업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영·호 남까지 수혜지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고 설명했다.

사전타당성조사가 2020년께 마무리되 면 2021년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달빛 내륙철도 건설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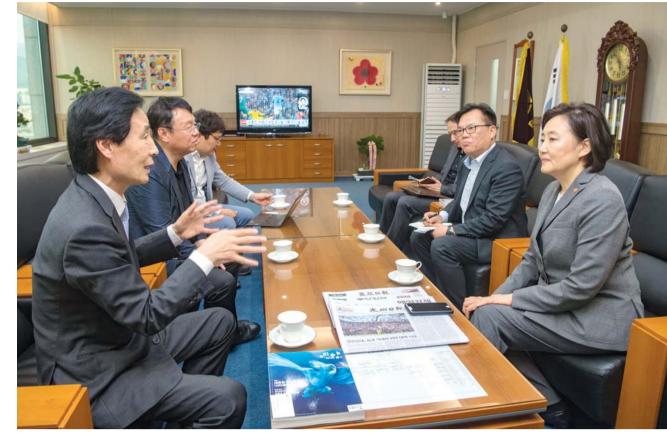
시와 대구시 등은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 획(2021~2030년)에 달빛내륙철도 건설 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해 광주시 와 대구시 등 영호남 10개 지방자치단체들 도 힘을 모았다. 지난 2월 광주시와 대구시 를 비롯한 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 ·순창·담양 등 경유지 10개 지자체 실무자 가 참석해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또 광주•대구시는 지난해 7월 각각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부담해 발주한 달빛 내륙철도 건설 연구용역이 오는 5월께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치권과 중앙정부 를 상대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이 연구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4월 제19대 대통령선 거 영호남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된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반영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본사 찾은 박영선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2일 오후 광주일보 본사를 방문해 김여송 사장과 호남지역 중 소기업 실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상생과 공존 실현할 플랫폼 지역과 민간이 주도…협업 통해 질적・양적 확대"

박영선 장관 광주 현장 소통 李시장 규제자유특구 건의에 "하반기 선정 방안 적극 검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기부 정책 철학 의 근간인 상생과 공존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창조경제혁 신센터는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 별 센터 간 협업, 지자체와의 연계·지원 을 통한 네트워킹형 협업 프로그램으로 질적·양적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 다. 그는 이어 "모태펀드를 활용한 지역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하 고, 센터가 발굴한 유망 스타트업의 수요 에 맞춰 직접 연계 지원하는 등 기업 니즈 에 따른 맞춤형 투자 지원에도 나서겠다"

박 장관은 "전국 센터별 특화기능에 다 른 센터들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전국 단 위 확산을 꾀할 것"이라며 "센터의 인프 라와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투자・글로벌 진출 등 후속 지원

은 센터 중심으로 연계해나갈 것"이라고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시장 관계자와

특히, 각 센터별 다양한 행사·교육·포 럼을 창업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SNS채널 등 단일 홍보 채널을 구축하고, 센터별로 개최되는 다 양한 행사에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해 참 여자간 정보공유와 협업 기회를 마련하 는 등 각 센터의 프로그램 정보 공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 날 간담회에서 센터와 협업해 스타트업 을 지원해 온 사례와 대기업의 다양한 오 픈 이노베이션 활동 등에 대한 의견도 나

박 장관은 이날 진곡단산 내 수소 스테 이션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소차와 수소 차를 운용하는 자율주행차와의 관계에 대해 중점으로 보고 싶었다"며 "미래 자 동차를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지와 정부 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광 주를 찾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소 관련 스타트업 제품과 수소연료전지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광주 수소전기차 카쉐어링 기업인 제이카 관 계자를 만나 업계 동향도 들었다.

박 장관은 오후에는 1913광주송정역

간담회를 갖고 골목 상권과 대기업의 상생 협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박 장 관은 이 자리에서 "광주시와 현대카드 의 협력 사례를 참고해 대기업과 전통 시장이 상생하는 모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이용섭 광주시장 과 자율주행차 플랫폼 제작 현장과 수소 실증스테이션 구축 현장을 동행하면서 규제자유특구지정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청소차, 셔틀버스 등 특수목적 자율차량의 시험과 운행 실현을 목적으 로 광주시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사업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공모 시범 단계 사업 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광주가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 다"면서 "인공지능 인프라와 자율주행 기 술이 상호 결합돼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광주 저속자율주행 차량을 하반기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는 등 적 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 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여성·청년 가점 더 늘리고 전략공천 최대한 줄이자"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회의

총선 공천룰 논의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 당 지도부는 21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 의를 열고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마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청년 등에 대한 가 점을 지금보다 더 높이고 신인에 대한 배 려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가산을 통해 확정된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에 대해 해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전략공천을 최소화해

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치 현실상 전략공천을 완전히 없앨 수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최고위원들도 수긍한 것으로 알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에서 "우리 후보자 내년 총선 공천 기준에 대해 보고를 듣고 가 없는 지역이 아니면 전략공천을 안 하 겠다"며 "당내 공천으로 분란이 생기거나 균열이 되면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일이 이번에는 없도록 경선을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민주당 모 최고위원은 "후보가 없는 지 역이면 몰라도 기존에 준비된 후보가 있는 곳은 전략공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대표가 다시 명확히 강조했다"며 "전략 공천보다는 경선을 거치는 게 가장 바람직 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현 지역위원장들 의 기득권을 일정 정도 제한하지 않으면 정치 신인들이나 타 경선 후보들은 '기울 어진 운동장'에서 경선을 치러야 하는 만 큼, 당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뉴스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보세요

